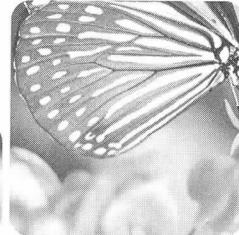


환경



소식

경계



우리 강 살리기에 “환경지킴이”가 앞장 선다

향후 10년간(2006~2015)의 물환경정책 방향이 기존의 정부주도에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하천환경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유역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등 5대강 수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하천의 오염행위 감시·계도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5대강 환경지킴이를 구성하여 금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5대강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이는 2006년부터 섬진강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환경지킴이 사업을 금년에 5대강으로 확대한 것으로 총 167명(한강 40명, 낙동강 50명, 금강 40명, 영산강 17명, 섬진강 20명)의 지역주민이 환경지킴이로 활동하게 되며, 주로 하천 오염행위 감시·계도, 하천변 정화활동, 수계 현황조사 및 지역주민의 생활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미 금년 1월 초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의 추진방향과 운영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2월 유역환경청별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환경지킴이 채용작업을 완료하였다. 지난해 섬진강 시범사업과는 달리 본류 중심의 활동영역을 지류까지 확대하고 감시·계도

외에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최종 선발된 환경지킴이를 대상으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소양교육을 지난 3월 13~14일 양일간 단양 대명콘도에서 실시했고, 환경지킴이들이 하천 보전활동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환경지킴이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3월 22일 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환경지킴이 발대식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담보된 5대강 환경지킴이의 지속적인 운영이 유역의 실질적인 수질개선, 주민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참여형 유역관리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금년 환경지킴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원 예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립환경과학원(원장 : 윤성규)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장래 오염원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2008년부터 수립예정인 제2단계 기본계획(2011년~2015년)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예측방법은 과거 오염원자료에 개발영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장래 오염원이 과다하



게 예측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시·군 전체 지역의 오염원 변화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동·리 지역의 오염원 변화율과 일치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어 세부 배수구역까지 정확히 오염원을 예측하여야 하는 총량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오염원 예측기법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도농 혼합지역을 대상으로 동·리별 과거 5년간의 오염원 추이분석을 통해 자연증감과 개발에 의한 증가를 분리하여 예측하는 방법으로, 기존방법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던 지역별 개발영향을 고려함으로서 오염원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리 지역단위별 예측이 용이하여 자료처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활용함으로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단계뿐 만 아니라 이행평가 단계까지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주시, 나주시 및 담양군에 적용한 결과 오차율이 미개발지역은 기존 예측방법과 거의 동일하였고, 청주시 및 나주시의 개발지역인 경우 기존 예측방법은 각각 3.14%, 4.01%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각각 1.67%, -2.51%로 정확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은 범용 소프트웨어인 MS EXCEL로 개발되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오염원자료 입력, 증감율 계산, 개발영향 기준 지정, 자연증감율 평가, 오염원 예측량 산정 등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활용함으로서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시 오염원 예측의 전체

과정이 자료 분석 값에 근거하므로 객관성이 확보되고,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발벗고 나서

정부는 내분비계장애물질, 일명 '환경호르몬'의 잠재적인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청 합동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1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31억원을 투자하여 어류 등 생물체와 인체에 대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영향을 규명하고 육상 및 해양환경, 식품 중 오염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평가하며, 이러한 기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위해성 평가를 실시,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 조사·관리계획 수립은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와 규명이 과학적으로 매우 어려워 국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5개 부·청이 공동 계획 수립·추진에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3월 13일 제5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괄〉

우선 2011년까지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기반 마련을 목표로 23개 분야, 155개 과제 추진에 총 331억을 투자하고, 공동과제와 부처 자체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위해성 평가, 대국민 홍보 등 관계부처 협력 및 공동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량을 함께 집중하며, 관계부처 합동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사업추진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환경부〉

환경부는 어류 등 생물체에서 나타나는 이성 생식세포 발현이 자연적인 현상인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생물체의 생활사 조사, 생물체 중 내분비계 장애영향 규명 등의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 중 잔류실태조사에 있어서도 기초 자료 확보 수준에서 벗어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감도의 내분비계장애물질 측정분석방법을 확립해 나간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및 수산물 중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잔류수준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양환경을 확보한다.

〈농림부·농촌진흥청〉

농림부, 농촌진흥청은 농경지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잔류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감시하고 축산물 중 잔류가능 내분비계 장애의심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독성이 저감된 대체 물질 개발, 농약 사용자에 대한 농약류의 노출 및 위해성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중 내분비계장애물질 잔류 수준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 및 다음세대로의 영향, 생식기계 질환 등

내분비계 질환과 내분비계장애물질과의 상관성 규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내에서는 1998년 라면 용기 중 내분비계장애물질이 검출되어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내분비계장애물질 대책협의회가 구성되고 각 부처별 조사·연구 계획이 수립되어 1999년부터 추진되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플라스틱의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가 성조숙증 등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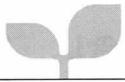
그러나, 현재까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인체영향에 대해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으로 없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금번 관계부처 합동 5개년 계획 수립·추진은 그간 각 부처의 개별적인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 방안 마련에서 벗어나, 내분비계장애물질 문제에 대한 범부처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연구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그간 개별적으로 연구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관계부처간에 조사결과를 원활하게 공유하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통해, 내분비계장애물질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검사업무 본격 추진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지난 2월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과 검사 업무를 새로이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검사 업무는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고, 공공재활용기반 시설 설치지원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설치 등의 업무는 공사에서 수행하는 이원화된 업무 구조였으나, 환경부의 경영혁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심의회에서 2007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공사로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공사는 이미 검사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완료한 상태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본사 및 지사에서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검사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재영 사장은 “2007년 하반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진단업무를 추가 수행할 계획이며, 향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처리시설 관련 사업으로도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지 외보전기관 추가 지정

환경부는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소재 (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대표 이대암)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가 서식지외 보전을 담당하는 종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인 ‘붉은점모시나비’, ‘물장군’이다.

※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 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의 지정으로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총 13개 기관이 되었으며, 2005년 9월 지정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와 함께 곤충을 담당하게 된 기관이 2개소가 되었다.

동 센터는 ‘붉은점모시나비’, ‘물장군’을 비롯하여 20여종의 곤충을 보유하고 관련 연구와 증식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육·증식시설, 기주식물 재배부지, 생태연구시설 등의 시설·장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동 센터는 2002년 5월부터 영월곤충박물관을 설립하여 곤충류에 대한 생태연구와 표본수집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동강유역 육상곤충상 조사 및 보고서 발간, 러시아 과학원 극동 연구소 곤충연구실과 “멸종위기 곤충 복원에 관한 공동 연구협조 MOU” 체결 등 곤충류에 대한 연구와 종 복원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곤충류 종보전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류군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안정적인 증식과 종보전을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 기관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